

김정일 정권의 ‘마지막 축포 로켓’?

정 영 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어제 북한은 1998년 8월에 이어 김정일 정권의 ‘2번째 축포’ 로켓을 쏘아 올렸다. 북한 당국이 ‘광명성 1호’로 명명한 로켓이 최고인민회의를 며칠 앞두고 발사된 것이 첫 축포였다. 그것은 북한이 군사를 ‘국가 중의 국사’로 자리 매김한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명실상부하게 국가 최고위 직책으로 부상한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새로 추대하는 기념축포였던 것이다. 김일성 수령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공식적으로 만방에 공포하는 축포 성격을 띤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오는 9일 개최될 새로 구성된 12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에서 ‘광명성 2호’의 발사를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부흥’의 표상으로 부각 선전하여 김정일 정권 3기 체제 출범과 그 정통성을 과시하는 ‘2번째 축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가 인공위성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나 이를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기술도, 의지도 없다고 하면서 비핵평화주의를 강조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핵실험을 감행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바 있다. 김정일 정권이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과학기술 개발조차도 군사적 용도를 우선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도 로켓발사시험이 군사적 용도가 아닌 평화적 인공위성 개발 권리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북한의 이번 ‘인공위성’ 발사 시험은 그들의 미사일 기술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일종의 정치·군사적 쇼에 불과하다. 그것은 북한의 이번 ‘인공위성’ 발사 시도가 그들의 이제까지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군사적 목표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5년부터 중국에서 액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DF-61 구입해 미사일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1981년에는 이집트서 24기의 스커드 B형(R-17E) 미사일과 발사대를 도입해 모방생산에 착수하였다. 이어 1984년에는 스커드 B형 복사형인 사거리 280km의 개량형 스커드 A형 개발 및 발사시험이 단행된 바 있다. 이듬해인 1985년에는 사거리 320~340km의 개량형 스커드 B형 미사일을, 1989년에는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형 미사일을 각각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90년대 들어와서는 10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북한이 1993년에는 사거리 1천300km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 1호’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에는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 기술을 자랑하는 첫 번째 정치·군사적 쇼를 단행하였다. 그것이 바로 ‘대포동 1호’로 명명된 사거리 1천800~2천500km, 무게 25t 으로 추정되는 3단식 미사일 발사시험이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하였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은 ‘광명성 2호’라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림으로써 장거리 운반체로서의 능력을 가진 미사일 기술역량을 과시하고 나섰다. 아직까지 분명하진 않지만 북한이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능력까지도 입증하게 되었다는 판단이 나올 정도다. 그 동안 북한이 사거리 3천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IRBM) 실전배치와 함께 사거리 6천km 이상의 ICBM 개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되어 왔지만 이번 우주 발사체 발사 시험으로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사된 로켓의 2단 추진체의 낙하지점이 북한 당국이 예고한 무수단 발사장 기점 3천600km에는 못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1998년의 대포동 1호의 사거리 보다 두 배 거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사실상의 ICBM 능력 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ICBM의 경우 탄두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해야 하며 그때 발생하는 초고열을 견딜 수 있는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북한의 기술능력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ICBM 국가를 운운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주발사체 시험으로 북한이 ICBM 국가의 문턱에 와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그것이 정치·군사적으로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북한은 이미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판단과 함께 이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 보유 사실이 더해짐으로써 미국을 부분적으로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핵무장으로 북한은 이미 강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례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약소국 핵미사일 무기의 위상과 관련해서 카플란(Morton A. Kaplan)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량의 핵무기만 가졌더라도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데 훨씬 더 신중하게 나왔을 것”이라 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경우, 핵미사일 카드를 활용하여 핵 강국인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억제 또는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 북한이 제한적인 핵미사일 수단을 가졌다 해서 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직접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다. 즉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무모함을 보일 수도 있다는 강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9·11 테러공격사건이 발생한 후 미 당국은 테러단체나 북한과 같은 소위 ‘무법국가(pariah state)’에 의한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한층 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비례 억지 군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렛대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풀고, 미국과의 안보대화(군사대화) 채널을 제도화하여 종전선언→북미평화협정 체결→유엔사 해체→주한미군 기능과 역할 변화 또는 철수로 연결하는 기본전략을 구사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카드를 지렛대로 하여 대남관계의 우위를 점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남한을 움직여 나가고자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그들의 핵미사일 무장을 공식화하면서 북·미 ‘핵군축’ 회담 요구로 북미 군사대화를 시작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 및 핵미사일 위협 제거가 급선무인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 핵위협 포기 선언 및 주한미군 핵시설 사찰 실시를 주장하고 북·미 군부실무접촉이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이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문제, 남한 내 핵무기 철수 및 남한자체의 핵무장 요소 제거와 검증,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쟁 연습 중지” 관련 북·미 협상을 추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기도 하다. 이는 북한이 그들의 핵미사일 카드를 제네바 핵협상 때처럼 물질적 보상 요구에 머물지 않고 북·미의 군사회담을 유도하여 북·미 중심의 평화협정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노력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들의 핵미사일 무장이 미국의 핵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미군사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군축회담 요구 합리화로 연결하려 할 수도 있다. 결국 북한은 핵군축 주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 주한 미군의 핵전력 폐기 및 대북 핵위협 차단 → 궁극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 요구 →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요구 관철을 꾀하려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로켓발사 시험으로 북한이 단기적으로 대외적 협상력과 체제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쾌거를 이룩한 것으로 자랑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체제위험을 심화시키는 자충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로켓발사로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조기에 성사시킬 가능성은 없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서 앞서 지적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도 협상국면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상쇄할 수 있는 요격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일본도 보다 적극적으로 가세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결국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협상역량이 '제로'가 되는 운명을 재촉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로켓축포가 단순한 '폭죽'으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점차적으로 더욱 고립되면서 경제적 저발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2012년을 상정해 놓고 있지만 또 다시 고난의 행군시기를 감내해야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거둬들인 강경책으로 북한 스스로가 대외적 경제지원 또는 원조를 차단한 결과로 초래될 수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이 먹는 문제의 해결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허장성세로 주민들의 허기를 달래고자 매달리는 상황을 지속하게 된다면 스스로 살길을 찾고자 하는 북한주민들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당국이 아무리 단속해도 장마당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주민들의 상행위 확산으로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져 당과 체제에 대한 충성도도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체제를 이탈하는 대량탈북사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경우 북한 당국은 그들의 주민들을 '핵미사일' 국가라는 자부심하나만으로 체제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 내기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은 이번 로켓발사가 그들의 정치·군사적 역량을 더해 준다고보다 김정일 정권의 '마지막 축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